

社說

돈에 의한 약육강식 안된다

바야흐로 대학도 돈바람이 일고 있다. 대학이 재벌기업에 재단으로 영입하고 각 대학마다 대학 발전 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전직 관료들의 총장 영입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의 모든 대학들이 교육재정확보라는 절대절명의 현실 앞에서 자못 비장한 각오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19년전 재벌 재단과의 마찰로 심각한 학내분규를 겪었던 학교의 학생 중 90%가 재벌기업의 영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학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다.

대학에서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개혁 추진 실적, 각종 대학 평가에 따른 국고의 차등 지원 등 대학간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될 전망이고 결과적으로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낳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작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대학으로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약육강식의 진화론적인 결과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대학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를 검토할 때가 왔다. 한 국가를 선진국이라 부르는 것은 특정한 분야가 선진화되었다고 해서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이 고르게 발전한 나라를 선진국이라 한다. 대학사회도 마찬가지다. 모든 대학들이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고르게 발전되어야만이 진정한 한국의 대학 발전이 아닐까 한다.

재벌기업에 기생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여 건강하게 자라는 대학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대학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곧 전체 대학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첨병임을 일러주는 바이다. 대학의 돈 바람이 아름다운 돈바람이 되느냐 추한 돈바람이 되느냐는 돈을 얼마 만큼 제대로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심없는 선거규칙 재정비 필요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며 철폐당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렴검표제 동아리연합회선거에서 이 원칙은 사라졌다. 위임장 제도에서 시작하여 기표용지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일련번호를 매기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과 휴학생과 제적생까지 투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위임장제도는 실제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현재의 동아리회장 선출방식인 간접선거제도에어서 존재하여서는 안된다.

올해 2학기 선거인명부 작성시 해당 동아리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하였으며, 그리고 선거인단에 포함된 각 동아리중 3인의 대표가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투표율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과반수에 모자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위임장제도를 도입하자는 생각은 선거 그 때그때 인원수 채우기만 하자는 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두번째 기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매겨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사실에 동의하였거나, 선거를 진행하고, 그 사실을 알고도 투표한 사람이라면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은 개인의 비밀투표권을 철저히 유린한 것이며 동시에 민주적인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일을 어떻게 후보자들이나 선관위가 서로간에 논의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휴학생의 투표행위는 분명히 인정될 수 없다. 본 대학의 규정집에 휴학생이 학적을 가진다는 조항은 휴학생으로서 그 사람을 증명한다는 것이지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다. 휴학생은 학교에 어떠한 공식적인 행위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이 아무리 동아리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자가 투표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각 동아리와 선관위, 후보자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후보자간 불명확한 합의를 통해서 원칙조차 무시할 수 있는 현행 선거후보간의 불명확한 방법으로 재정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현실로 다가오는 '깨끗한 세상'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전망과 의의

시사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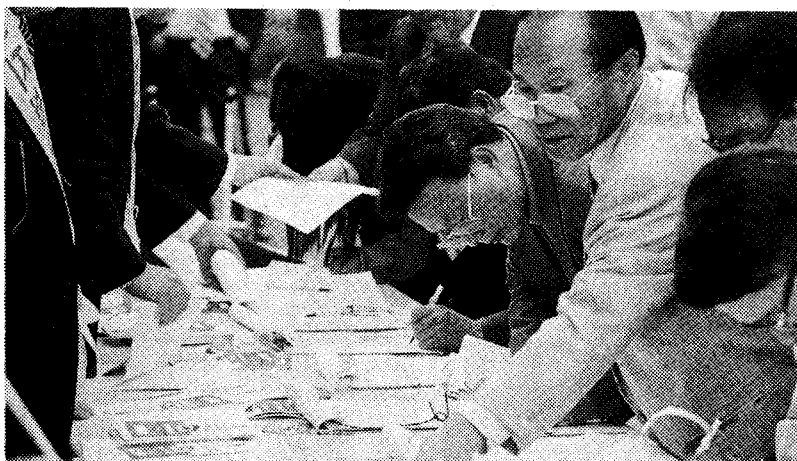
최근 들어 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무기거래를 둘러싸고 무기중개상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구속되고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인의 뇌물수뢰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다. 연이어 일어나는 공직자 뇌물수수 혐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게 하며 현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야권측은 "공개적인 검증절차과정 없이 청와대가 밀실에서 '감싸소'식으로 인사를 처리해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이의 방지를 위해 인사검증절차의 필요성과 인사과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 부패방지 법안 제도를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올 해 초부터 부정부패를 근절할 법률 제정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 본부(이하 참여연대, 본부장: 김창국 변호사)와 한겨레신문사는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도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열린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에 관한 대토론회에선 우리나라 부패방지책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우선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



▲뇌물수뢰로 구속된 이 전국방장관



▲부정부패 방지법 제정위헌 서명운동

현 부패방지책 뇌물비리확산 막지못해 잇따른 공직자 비리사건으로 입법 타당성 입증

한 직무감찰수단을 갖지 못한다. 인력까지 부족하여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문민 정부 들어 도입된 금융실명제나 공직자재산등록제 등 부패방지책이 아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는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시안을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여 재직 국회의원과 과반수

인 1백51명의 의원과 해외서명자 65명을 포함해 시민 2만2천5백21명의 서명을 받아 이번 달 7일 공식적으로 제정시안을 발표했고 국회에 청원형식으로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와 해임건의제, 행정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따로 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개 장에 걸쳐 1백50조로 짜여진 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윤리 및 행동규범=공직자는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직무 관련자나 공직자 서로간에 받을 수 없고 부정부패로 판명되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관련 사기업체에 10년 안에 취업할 수 없다.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국세청, 법무부 등의 모든 직원과 기타 6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해야 하며 허위등록혐의가 발견될 경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공익정보제공자와 보호 공직자는 내부비리를 발견했거나 비리를 강요, 제의받은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나 전직 공직자가 비리사실을 고발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돈세탁규제=돈세탁행위를 처벌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은 부정의 의혹이 있는 금융거래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부패행위자 처벌=사정당당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며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수뢰공직자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부패방지특별수사부=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다룰 부패방지특별수사부를 대통령으로 직속으로 설치한다.

특히 제정시안 중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는 제정될 경우 부패방지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조직의 내부문제에 대해 실무자들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내부부정 고발을 할 경우 신변의 법적 안정성이 보장된다'함은 손색수 없는 내부감시자를 상주시켜 뇌물수뢰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수검찰제 도입부분 등 여당측에 민감한 조항이 적잖이 포함된 이 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측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측은 이 전 복지부장관비리사건으로 인해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고조됐다고 보고 가능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에 최대한 압력을 가하려 한다. 야당측의 파악대로 김영삼 정부 각료들의 각종 비리연루사건으로 입법의 타당성이 입증된 상태이고 또한 OECD가입을 앞두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부정부패방지법'의 국회입법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논설부)

PC통신원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규하씨 법정 증언거부...법원사 사전규정 잘못된 처사

지난 14일 5·18, 12·12공판장에 최규하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증인출석요구를 거부하던 최 전 대통령은 이날 강제구인되어 증인석에 서게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최 전 대통령은 군부세력의 재판에 대해 한마디의 증언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최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PC통신(하이텔)게시판에는 비판과 옹호의 목소리가 교차하였다.

최 전 대통령이 증언을 할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맞대응하는 발언을 우려해 함구해 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I.D.: India) 최 전 대통령이 발언거부에 대해 내세우는 이유로 '국익차원'을 지목하는데 국익이 아니라 철저한 개인이해에 따른 발언거부라는 의견(I.D.: YBN130) 등 개인적 문제로 증언을 거부한 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비판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증언거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5·18, 12·12사건 때 지극히 참정하고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기에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의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는 의견(I.D.: magach)도 있었다.

이런 의견과는 상반되게 이번 재판은 정치적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최 전 대통령의 증언거부는 인정할 만 하다는 의견이 있었고(I.D.: seos) 가정의 평화와 자식들의 안정을 위해 부모들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희생하는 것과 같이 최 전 대통령을 국가와 다음 대통령들을 위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는 의견(I.D.: dj47)과 최 전 대통령을 증인신분으로 소환함에 있어 범법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전·노 전 대통령과 같은 범법자로 사전에 규정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고려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I.D.: YUJAE)

그러나 이제 5·18과 12·12공판은 완전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끝날것으로 보여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은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김동욱 기자>

고 황 만 평



"이젠 안경 장수까지..."



Cosmopolitan 박주희
대우의 외부에서 정보담당자, 매일 Internet
와인보드를 모니터하며 75% 무역지사 및
법인장과 국내 유통업체에 Email로 News레전
대우그룹 회장비서실 96. 3 인사

Innovator 김태욱
신식 개발과정에서 Computer Simulation을 이용하여
차량의 소음 및 진동특성을 해석하고 개선함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신형개발팀 차장비서실 96. 2 인사



입사는 1년차, 하는일은 10년차

Challenger 정천교
입사 8개월만에 공주백화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부지신설 및 계약체결을 성공시임
(주)대우 국내유통본부 신구사업팀 96.1 인사

Futurist 이재규
96 한국전자전 대우전자 부스에 전시중인 미래생활용품
Concept Product를 13개 만들음
대우전자 디자인실 생활가전팀 96.12 인사

Creator 김현주
수출 1주임대에 3천의 영화를 선택하여
에그프로그램을 편집 제작함
DCN 편집제작부 PD 96. 6 인사

기회요? 능력만큼 주어지죠!
이렇게 큰 일을 신입사원이 했다고하면
모두들 못믿어 하십니다
하지만, 대우라면 가능한 일이지요
신입사원에게도
큰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대우가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대우가 있습니다